

盧대통령 이달중 탈당할 듯

개각후 임시국회 폐회 맞춰 개헌안 발의

노무현 대통령은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열린우리당을 탈당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한명숙 총리가 당 복귀 의사를 밝힐 경우 새 총리를 지명하고 일부 정치인 출신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탈당 및 개각 절차를 밟은 후 노 대통령은 민생·개혁 입법안들을 처리하는 이번 임시국회가 폐회되는 이달 6일 이후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이 임시국회 회기 중 열린우리당을 탈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취지의 진정성을 알리고 임시국회 처리과제인 사법개혁안 등 민생 개혁법안들이 초당적 사안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탈당이 개헌안 발의의 사안만의 종속변수는 아니다"면서 "당과의 문제도 있고, 대통령이 임기말 물밑없는 국정추진의 지가 강하고, 특히 민생·개혁 법안들에 대해 강한 의욕을 갖고 있는 점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선에 앞두고 임기말 당적 보유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임기말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 정책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탈당의 중요 이유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열린우리당과의 관계에서 2·14 전당대회를 거쳐 정세균 신임 당 의장을 중심으로 한 새 당 지도부가 구축된 만큼 향후 대통합을 위한 당의 활로를 터주는 차원에서도 탈당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이 탈당할 경우 당 출신 인사들의 내각 퇴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당 출신으로 잠재적 대선후보군으로도 분류되는 한 총리가 우선 사의 표명 절차를 밟고 당으로 복귀하고, 대통령과 함께 당적을 정리하지 않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도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한나라 '검증 공방' 점입가경

'배후론' 정면 충돌...내분 위기

한나라당 양대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 간의 '검증공방'이 위험수위로 치달으면서 내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양 진영은 박 전 대표측 법률특보를 지낸 정인봉 변호사와 이 전 시장의 '위증 교사' 의혹을 제기한 김유찬씨 기자회견의 '조직적 배후론' 등을 놓고 일전을 불사할 태세에서 양측의 전면전은 사실상 조망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특히 이 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출신인 김유찬씨가 당 지도부의 자체요청에도 불구하고, 21일 2차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해 이번 사태는 중요한 고비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시장측 정두언 의원은 20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지난 5일 정 변호사를 포함한 15명이 (이명박 약점 퍼뜨리기) 대대회의를 한 뒤 정 변호사와 김씨가 잇따라 기자회견을 하고 박사모는 총동원령을 내렸다"며 '박캠프 커넥션'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측 이해훈 의원은 같은 방송에 나와 "우리는 김씨와 일면식도 없고 그가 쓰는 책의 내용도 본 적이 없다"면서 "정 변호사가

김유찬씨 "오늘 2차 회견"

이명박측 "박캠프 커넥션"

박근혜측 "의혹은 밝혀야"

몇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김씨를 만난 것을 갖고 확대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공작"이라고 일축했다.

양측은 당 경선준비위의 공정성 문제를 놓고도 팽팽한 대치전선을 형성했다.

박 전 대표측 최경환 의원은 "경선위에서 제대로 검증하기 힘들 것으로 본다. 언론과 시민단체, 법조계 등 중립적 인사들로 별도의 검증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캠프 내에서는 "경선준비위 탈퇴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이냐"는 강경발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전 시장측 박영준 의원은 "정인봉 자료의 검증 여부를 판단할 때도 만장일치로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왜 지금 와서

뒤늦게 문제를 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두 주자 진영의 갑론을박에 대해 경선준비위는 "당에서 모든 문제를 처리하겠다"며 양측의 자제를 당부했다.

경선준비위(위원장 김수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임시 긴급회의를 열어 김유찬씨의 주장도 경선위에서 다루기로 하고, 김씨에게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겨줄 것을 요청했다고 이사회 경선위 대변인이 전했다. 경선위는 김씨에게 추가 기자회견 자제도 당부했다.

그러나 김씨는 "당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다만 이 전 시장 측이 방상에 측근을 출연시켜 거짓말을 하고 내용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내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자료 일체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신에게 돈을 건넨 사람의 이름과 시간, 장소와 함께 이 전 시장 측에서 준 법정 예상 질문지와 답변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열린우리당 탈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이날 일제히 한나라당의 검증논란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지병문 의원 주관 '광주 문화도시 토론회' 전문가 의견

"문화전당, 시민·관광객 체험 시설 필요"

"문화산업, 상품화 가능 분야 집중 육성"

국회 문화유지위원회 의원(사진)은 지난 1월부터 광주 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안 마련을 위해 3차례에 걸쳐 전문가 토론회를 가졌다. 지 의원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문가 토론회에서 제시된 안을 중심으로 이달 중 문광부·광주시의 실무자 의견 조율을 거친 뒤, 3월에는 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 최종안을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문화관련 전문가들의 주장을 요약한다.

◇문화전당=문광부는 문화전당의 중점 기능을 '교육·연구'에 두고 있지만 광주시와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전문가를 위한 기능보다는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교육·연구 기능을 굳이 문화전당 내에 두지 않더라도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을 통해 아웃소싱하면 충분하고, 그로 인해 생기는 공간은 관광객들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토포니즘을 채워 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또한 문광부가 제시한 문화전당

내 다목적 시설 겸 가변공연장은 최소 300석에서 1천500석에 이르는 규모지만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오페라나 뮤지컬 등 대형 공연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 아닌 만큼, 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술단체들이 주장해 온 대형 공연장 건립도 검토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지역 예술단체들은 문화수도에 어울리는 세계적인 공연을 위해서는 최고 수준의 전문 공연장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 재구성=문광부는 광주 전역을 7대 문화지구로 나눠 동시에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광주시는 도심 집중 리모델링 방식을 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심 활성화를 통해 그 효과를 자연스럽게 광주 전역으로 확장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산과 관련해서도 문광부는 지방비 부담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광주시는 국비 상향을 요구하고 있지만 문광부·시는 도심 활성화 예산 등 부각 부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직접 상품화할 수 있는 5개 장르 육성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화산업은 문화산업은 전국적으로 태동기에 있는 상황이기에 선도기업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광주시와 문광부는 협의를 통해 1~2개 문화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대안을 내놓았다.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윤리위원회에 소환된 정인봉 변호사(맨 왼쪽)가 심각한 표정으로 소명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손학규 '검증 공방' 반사이익 얻나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간 '검증 공방'이 격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두 예비후보를 추격중인 손학규 전 경기 지사가 이번 공방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양측간 분열이 또 한 번의 대선 실패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박 전 대표와 이 전 시장에게 실망한 한나라당 성향 유권자들이 그 대안으로 손 전 지사에게 눈을 돌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특히 최근 지지율이 상승세에 있는 손 전 지사는 이른바 '빅3'중 두덕성 면에서 가장 자신감을 보여 온 데다 '내분'으로까지 비쳐진 검증 공방에 휘말리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차별성과 함께 안정감을 주고 있다는 기대에서다.

범여권의 끈질긴 '러브콜'을 거듭 일축하면서 "내가 한나라당의 주인"이라고 강조해온 점은 현 '검증 정국'에서 손 전 지사의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다는 게 손 캠프의 분석이다. 손 전 지사와 측근들은 겉으로는 입을 닫고 있지

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번 검증공방이 어느 정도의 플러스 효과를 올 것으로 보고 있는 듯 하다. '현상타파'에 신경을 써야 하는 손 전 지사 입장에서는 양측의 첨예한 공방이 경선관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특히 자신에게는 실보다는 득이 많은 것이라는 판단이 선 듯 보인다. 손 캠프 일각에서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며 이번 '검증논란' 사태를 반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여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손 전 지사의 대리인 역할을 맡고 있는 정문헌 의원은 "(박 전 대표와 이 전 시장이) 계속 싸운다면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면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이런 상황을 계속 지켜본다면 누가 본선에 나가야 집권할 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pkp@kwangju.co.kr

조이트리플

1인실 1만원, 2인실 1.5만원, 3인실 2만원

1인실 1만원, 2인실 1.5만원, 3인실 2만원

스피리어

1인실 1만원, 2인실 1.5만원, 3인실 2만원

1인실 1만원, 2인실 1.5만원, 3인실 2만원

다들

1인실 1만원, 2인실 1.5만원, 3인실 2만원

1인실 1만원, 2인실 1.5만원, 3인실 2만원